

대한상의 브리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제111호 2019년 12월 9일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시작된 지 300일이 지난 현재, 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180건을 돌파하며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제 왕국’ 한국을 바꾸려면 - 규제샌드박스 성공의 조건 -

지난 1월 신산업 발전과 벤처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기대를 안고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11월 말까지 180건의 승인 건수를 기록하며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공유주방(다수 사업자의 주방 공유 허용)’, ‘은행 알뜰폰(은행에 휴대폰 판매 허용)’ 등 성공 사례가 나오며 업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기대에 못 미치는 샌드박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거지기서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을 내주면

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다.

실제 승인된 180건 중 대부분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에서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는 샌드박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업체이다. ‘반반택시’는 지난 2월 서비스 지역을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 신청했지만, 서울 6개 권역만 허용됐다. 서비스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한정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

내국인 공유 숙박엔 ‘집주인 실거주’ 조건이 붙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근처 1km 이내여야 하며, 영업도 1년에 최장 180일만 가능하다. ‘단기간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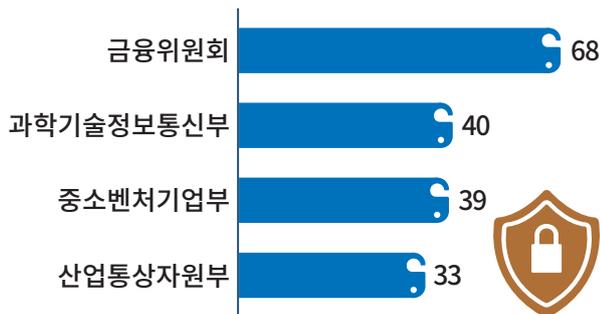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지만 또 다른 심사의 벽에 막힌 사례도 있다.

유전자 진단업체 ‘마크로젠’은 유전자 검사 항목을 현행 혈당, 탈모, 노화 등 12개에서 고혈압, 위암 등 25개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샌드박스 승인은 받았지만 까다롭기로 유명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실제 ‘마크로젠’은 지금껏 네 차례나 심의를 신청했지만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

(단위 : 건)



※ 자료 : 국무조정실 / 11월 27일 현재 기준 승인건수

공무원 '규제 본능'이 문제

이처럼 규제개혁이 반쪽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정부 규제는 '하라는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규제를 타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에 익숙해 변화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실제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가 받는다. **그러나 심의 시에는 해당 사안에 규제 권한이 있는 실무 부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농어촌 빈집 숙박 공유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다자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들의 장애물은 '농어촌정비법'에 있었는데, 해당 법은 '농어촌 거주자'만 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자요' 측이 규제 특례를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규제 본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규제샌드박스과 관계없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이동식 동물 장례 서비스를 준비 중인 '브이아이펫'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동물 장례는 '공원'에서만 가능하다. '브이아이펫'이 4월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요청하자 심의위원회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시 신청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며칠 뒤 농식품부는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에 나섰다. 업계에선 '새로운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해관계' 사안은 묵묵부답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익단체와 기존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유보한다는 지적도 있다.

빈 택시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인 딜러버리T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사업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ICT 샌드박스로 선정된 폐차중개업체 '조인소토' 역시 기존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2년간 3만 5,000대에 한정해 사업할 수 있다는 단서 조건을 떠안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샌드박스 심의 시 책임 회피와 심의 지연이 거듭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안은 없을까? **과도한 조건부 승인을 지양하고, 쟁점 이슈도 적극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제도 실효성 확보도 시급하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뒤엔 또 다른 규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지역, 영업시간, 수수료 제한
공유 숙박	집주인 실거주 조건, 180일 영업제한
유전자 진단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추가 심의
폐차 중개업	중개 사업수량 제한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주류 면허 취득, 품질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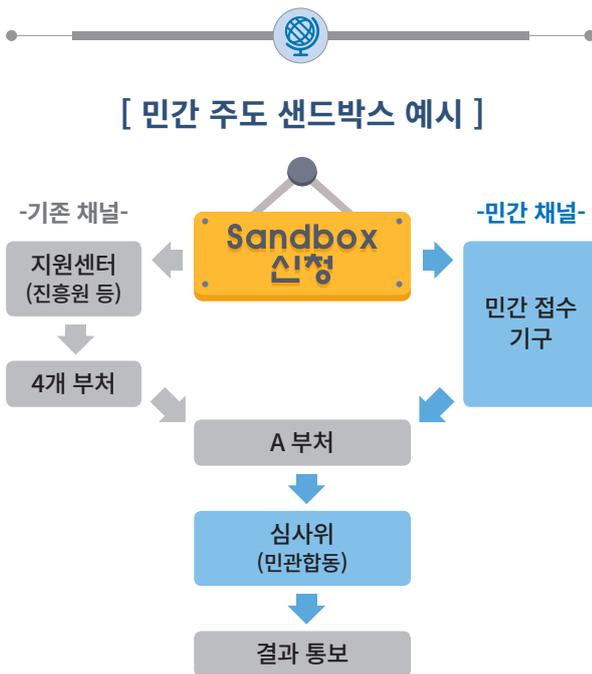


샌드박스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① 민간 주도 샌드박스 도입

업계는 현행 4개 정부 부처만 규제샌드박스 승인 신청을 받는 상황에서 ‘민간 접수 채널’을 신설해 샌드박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인 사이에선 공무원과 일하다 보니 ‘허심탄회하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샌드박스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인력부족 등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민간 채널 추가’가 필요한 이유다.



실제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에서 ‘일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방안을 협의하면 좋겠다’는 경제계의 건의가 있었다. 혁신의 문이 늘어나 신속 심사가 가능해지고 민간 기업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샌드박스 임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임시 허가’ 딱지를 좀 더 빨리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시적’인 사업 허가(규제 면제·유예) 조치다. 최장 4년(기본 2년, 연장 2년)인 유효기간 안에 사업성과 효용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필수 요건만 심사하는 식으로 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③ 샌드박스 부대조건 등 제도 정비

시행 300일이 넘은 만큼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기업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에 근거해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에 ‘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샌드박스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 허용, 사후 정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의 근거가 되는 법엔 ‘우선 허용, 사후 정비’ 관련 조문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기업들의 얘기다. 신사업을 허용할 땐 최소한의 규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샌드박스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규제 틀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면제해서 혁신을 이루자는 취지다. 샌드박스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토록 해야 할 때이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12월 9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7	2.0	2.2	2.0	2.3
세계	3.7	3.6	2.0	3.4	2.9	2.9
미국	2.2	2.9	2.4	2.1	2.3	2.0
중국	6.8	6.6	6.1	5.8	6.2	5.7
일본	1.9	0.8	0.9	0.5	1.0	0.6
EU	2.5	1.8	1.2	1.4	1.2	1.0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9.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75	1,209	1,198	1,184	1,167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86	1,137	1,116	1,094	1,073
원/위안	174.4	167.5	166.4	170.9	171.0	168.2	166.9	166.3
원/유로	1,283	1,276	1,299	1,319	1,346	1,319	1,309	1,291
유가(Dubai)	53.8	53.2	69.7	63.3	59.1	61.1	59.4	62.0

3. 산업지표

(단위-%(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9.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3.0	2.5	1.4	0.7	0.0	0.5	-0.5	-
소매판매	3.9	1.9	4.3	-0.3	4.1	3.1	2.1	-
설비투자	-1.3	14.1	-3.8	-4.8	-4.0	-3.4	-4.8	-
수출	-5.9	15.8	5.4	-11.1	-14.0	-11.7	-14.8	-14.3
수입	-6.9	17.8	11.9	-2.6	-4.3	-5.6	-14.6	-13.0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